

K-방산 세대교체...첨단기술 스타트업이 이끈다

정부, 2030년까지 100개사·벤처천억 30곳 집중 육성 대기업 탈피...‘진입 확대·성장 지원·상생 확산’ 방침

정부가 방위산업의 무게중심을 기존 대기업 제조 구조에서 첨단기술 스타트업으로 확장하는 대대적인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선다.

군 수요를 충족하는 산업을 넘어 선도하는 혁신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성장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 자율무기체계, AI 기반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 등 민간 첨단기술을 앞세운 혁신기업이 방산

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대전 양상이 AI·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방산도 제조·체계기업 중심 구조에서 기술 기반 혁신 생태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미국은 평균 업력 10년 안팎의 스타트업들이 벤처투자를 기반으로 자율비행 드론,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군사 영역에 신속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스타트업은 복잡한 방위사업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았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입 확대·성장 지원·상생 확산’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 전환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기회를 넓힌다.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쉼터’를 신설하고, 선정 기업에는 군 실증시험을 연계해 개발 제품의 현장 검증 지원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피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성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윤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다. 드론·로봇·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마련해 스타트업이 무기체계 개념과 성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을 위한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된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 국방 인프라 활용 정보와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보안 인프라 지원도 병행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군·체계기업과의 협업을 전제로 기술검증부터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오프라인 거점 역할을 맡기고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GVC30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방산 기업 매칭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 기반 확장도 병행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조선 산업을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하고, 합정 MRO 분야 클러스터도 추진한다.

상생 구조 개편도 이번 대책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체계기업에는 원가산정과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무기체계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성우 중기부 장관은 “그간 방위산업은 군 수요를 충족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군 수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며 “이번 정책과제 중 방산 스타트업 쉼터 참여기업을 이번주부터 모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375만원’ 3.3% 증가

40대 가장 높아...남녀 소득 차이 1.5배 유지 60대, 20대 추월... 70세 이상 5.8% 증가 최고

2024년 임금근로자 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 정도 늘어나고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자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임금근로자 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3.3%) 증가했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1년 4.1%에서 2022년 6.0%로 높아졌다가 2023년 2.7%로 낮아졌다. 2024년엔 이보다는 높아졌으나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았다.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3.6%)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613만원으로 전년보다 20만원(3.3%) 늘었다. 중소기업은 9만원(3.0%) 증가한 307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 평균소득은 남성(442만원) 근로자가 여성(289만원)의 1.5배였다. 전년 수준의 격차가 유지됐다.

전년 대비 남성 근로자 평균소득은 15만원(3.6%), 여성은 10만원(3.6%) 늘어나 증가율이 같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가 469만원으로 가장 높고, 50대(445만원), 30대(397만원), 60대(293만원), 20대(271만원) 순이었다.

70세 이상은 평균 165만원을 받았다.



데이터처는 고령화 시대를 반영해 이번 통계 작성부터 60세 이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60대 평균 인건비는 20대보다 많아서, 은퇴연령층의 소득 수준이 청년층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70세 이상(5.8%, 9만원), 40대

(3.9%, 18만원) 등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60대와 50대도 각각 3.8%, 3.7% 증가해, 20대(3.0%)나 30대(2.9%) 증가율을 웃돌았다.

돌봄 수요 증가와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70세 이상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업에서 보수 증가율이 높았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도 높아졌다. 근속기간 20년 이상(848만원), 10년~20년 미만(608만원), 5년~10년 미만(430만원), 3년~5년 미만(369만원) 순으로 많았다.

산업별로 평균소득은 금융·보험업(777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99만원)에서 높고, 숙박·음식업(188만원)과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229만원)에서 낮았다.

일지라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지라는 2개로 집계된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대한직업자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320만원 상당의 소화기 1160대를 전달했다.

주택건설협회, 취약계층에 소화기 지원

직업자사·광주모금회에 전달...“사회적 책임 실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최갑열)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대한직업자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320만원 상당의 소화기 1160대를 전달했다.

협회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7040대의 소화기를 지원하며 화재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 서 왔다.

이번 기부된 소화기는 협회와 골드클래스㈜, 고운주택㈜, ㈜광산종합건설, ㈜대광건설, 대리주택건설, 디에스종합건설, ㈜리리시빌주택, ㈜리제, 모아건설산

업(주), ㈜모아종합건설, ㈜영무건설, ㈜유미개발, 중흥토건(주)등 13개 회원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두 기관을 통해 소방안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화재 예방과 노후 소화기 교체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갑열 회장은 “소화기 지원사업이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례없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꺼이 뜻을 함께 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건설경기 예상보다 나빠 구조조정으로 정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지금 건설경기 저회 예상보다 나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연간 전체로 보서는(올해 성장률 전망치) 지난해 11월에 예측했던 1.8%보다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많은 건설이 됐고, 그것이 부실화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지난해보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성장률이 1.0%였기 때문에, 그보다 상당히 높다고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장기화에 관해선 “한미 금리차 자체가 저회와 통화정책을 하는 데 바인딩한(binding·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5900선 터치

5930선 오른 뒤 5846.09 마감 삼성전자·하이닉스 상승 최고

코스피가 23일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장 시작과 동시에 사상 처음 5900선을 터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4.58p(1.63%) 오른 5903.11로 출발해 37.56p(0.65%) 오른 5846.09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직전 거래일 세운 증가 기준 역대 최고치(5808.53)를 경신한 것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장 초반 5931.86까지 올랐다가 이후 오름세가 둔화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47.62p(0.69%) 상승한 6909.51, 나스닥종합지수는 203.34p(0.90%) 된 2만2886.07에 장을 마쳤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하자 시장은 급반등으로 회복했다.

대법원 판결 후 추가 관세의 부과 형태, 관세 환급 방식과 소송 여부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많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81p(0.47%) 오른 4만9625.97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하자 시장은 급반등으로 회복했다.

대법원 판결 후 추가 관세의 부과 형태, 관세 환급 방식과 소송 여부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많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국내 증시도 미국발 혼풍에 장 초반 가파르게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B’(차선책)를 내세우며 반발하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계속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삼성전자는 1.53% 오른 19만3000원, SK하이닉스는 0.21% 오른 95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때 각각 19만7600원, 98만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01p(0.17%) 내린 1151.99에 장을 끝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94p(1.12%) 오른 1166.94로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179억원, 1807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62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1조5137억원, 14조3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

광주조달청, ‘가짜일 버리기’ 토론회

불필요한 업무 정비·현장 대응 업무 등 논의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현)은 23일 광주조달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일’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필요한 업무와 형식 중심의 행정을 과감히 정비하고, 조직의 역량을 공공조달 핵심 기능과 현장 중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조달청은 자유 토론을 통해 ‘출일 일’, ‘없앨 일’, ‘바꿀 일’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단순 업무 축소를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시스템 활용 확대, 보고 절차 간소화, 의례적 행사 폐지, 회의 운

영 내실화 등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광주조달청은 이날 도출된 과제들을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와 제도개선 등 단계적 실행이 필요한 과제로 구분해 분청에 건의하고, 조직 내 불필요한 업무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우현 광주조달청장은 “가짜일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일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형식보다 성과, 관행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